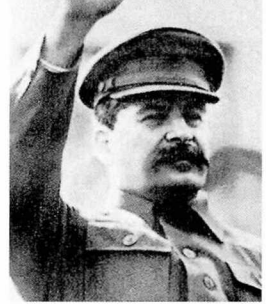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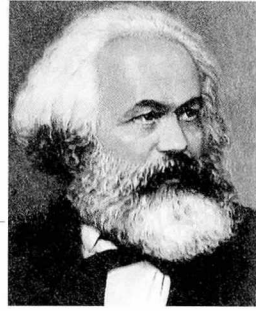


역사의 질곡에 따라 부침 거듭한 마르크스주의

국내의 마르크스주의 수용사

김수행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970년대에 들어서도 노동자 계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마르크스주의는 엘리트주의나 파시즘으로 오해받으며 변방을 떠돌았다. 1980년대 '종속이론'의 대량수입과 유행은 민족경제론에 기반한 제국주의 비판이었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로 보긴 힘들었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다.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87년 가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다. 사진은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마르크스, 엥겔스, 스탈린, 레닌.

내가 감옥에 갈 각오로 《자본론(전5권)》(칼 마르크스, 비봉출판사)을 번역 출판한 것이 1989년 3월이었다. 서울대에 부임하고 한 달 만의 일이었는데,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전해 9월에 《자본론》 일부를 출판했다는 죄목으로 출판사 '이론과 실천'의 사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듯 험악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국내에 어떻게 수용됐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한 이래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서적은 금서였고, 수많은 독서회 사건으로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은 대부분 한두 번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농업문제, 경제사 연구자들 중심으로 처음 수용돼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농업문제'와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농업을 대신해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마도 1970년대였을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지주와 소작농, 고율의 소작료, 농지개혁, 농업협업화, 농산물가격, 농촌의 과잉인구 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였고 이 문제들을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논의한 것이다. 사실 《자본론》 제3권 제6편에는 주로 토지소유와 지대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 사이 사이에 봉건적 지주의 문제나 소규모 농민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경제학이 일본에서 물려받은 마르크스계통의 것뿐이었고, 서구의 근대경제학은 전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만, 서구의 근대경제학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든가 "수요 공급

의 법칙"이나 "개인이 이익을 합하면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근대경제학의 논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사에서는 단연 마르크스주의가 판쳤다. 인류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한 것이 마르크스였고, 그가 제시한 역사적 유물론 및 생산양식론과 이행론은 경제사 연구의 길잡이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는 농업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인간해방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적 핵심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토지개혁 등으로 봉건사회를 변혁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으며, 후진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온갖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는 엘리트주의나 파시즘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이론으로 주목받아 1980년에 이르면 '종속이론'이 수입돼 크게 유행한다. 공업화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선진국, 특히 미국과 일본에 기술적으로, 금융적으로 그리고 수출입시장에서 종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피비린내 나는 탄압이 미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이뤄졌다는 믿음이 종속이론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종속이론의 '기본정신'이 "우리 사회는 제국주의의 틀 속에 있는 한 결코 중심으로 진입할 수 없다"

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제국주의의 틀을 벗어나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여기에서 ‘민족경제론’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마르크스주의적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돼 중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직설적으로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제대로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87년 가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다. 노동자계급이 분명한 하나의 큰 사회세력으로 등장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급속히 건설됐으며, 기업가들 및 정부와 정정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인간해방, 자본주의체제의 변혁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개선, 노동3권의 쟁취, 단체협약의 정기적인 체결, 파업의 실행, 건강보험의 확대, 사회개혁의 추진 등 노동자계급은 드디어 자기의 계급이익을 위해 소리 높여 외친 것이다. 그러나 1987년 가을의 노동자 대투쟁은 종전의 ‘민주파 대 반민주파’의 대립구도를 ‘보수파 대 진보파’의 대립구도로 갑작스럽게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민주파에 속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보수파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됐다. 그에 따라 학문·양심·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자유까지 제한됐고, 마르크스주의는 다시 억압받게 된 것이다.

소련·동구권 몰락의 자본주의 승리로 착각해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학생 및 지식인들의 강한 연대로 1993년 김영삼 정권이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점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을 것인데, 소련이나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관심은 일반인들뿐 아니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사라졌다. 특히 지식인들은 재빠르게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온갖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했다. 이런 양상은 우리의 학문적 전통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우리 학계가 빈 양철통 같아 외풍이 물어치는 대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왜 일어났는가를 연구해야 하고, 과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현실의 사회주의’ 인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지만,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바로 자본주의의 승리고 자본주의가 인류의 유일한 최선의 체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사실상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첫째 임무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비판 위에서 자본주의의 희생자인 노동자계급을 해방하고 모든 인간을 해방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둘째 임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의 하나의 가능한 형태가 몰락했다고 첫째 임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소용돌이를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세계 전체의 장기불황을 보게 됐다. 선진국에서는 실업률이 상승

하고 성장률은 둔화하며 사회보장제도는 해체되고 서민의 생활은 악화하며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1930년대 이후 최대규모의 불황에 빠진 것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으로부터 시작해 온갖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성과 모순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강요한 상품시장의 개방, 외환시장의 개방, 자본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루과이 라운드의 승인, 금융시장·외환시장·자본시장의 자유화, WTO와 OECD 가입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인 것이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에는 드디어 경제공황이 폭발해 IMF의 신탁통치를 받게 됐다. 그리고 IMF의 신탁통치와 김대중 정권의 친자본가적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공황론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부활한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황론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계속 고도성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공황론에 관한 관심이 크게 일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진정한 현실적 기반 위에서 부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비판학문이라는 입장이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마르크스주의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더욱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잔인성, 폭력성, 비도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익대립과 계급투쟁이 더욱 강화되므로, 보수정치인이나 보수언론은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맹렬하게 공격하게 마련이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여러 분야의 양심세력과 더불어 견뎌낸다면,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매우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김수행 교수는 런던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자본론연구1》《일기쉬운 정치경제학》 등이 있고, 역서로 《자본론》 등이 있다.